전기·수도·통행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 물가대책… 공공요금 상한제 年內 도입
곡물가격 급등에 할당 관세 추가 인하 검토

상반기 중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일정기간 적용할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가 도입된다.

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동향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인하가 논의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도 검토된다. 유류비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 경감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석유류, 곡물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상승 등 비용측 요인과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고하저형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전기료, 고속도료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 전력요금, 가스요금, 도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 방식을 올해 안에 도입해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요금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6개 요금은 조례개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시내버스·택시·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품목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추가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중기청 정책자금 중 25%를 2월까지 조기 지원하고 유류비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등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통신·교육서비스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전·월세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서민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물량 및 전세자금 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는 합헌"

憲裁, 노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의 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후보를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받을 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光·전남 공공기관 청렴도 낮다

전국 하위권… 내부 자정운동 필요
여수·순천·담양·해남·장성은 금품 제공률 '0'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대민· 대기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하위권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시가 9위, 전남도가 3위에 올랐으나 올해에는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 자정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건설, 환경· 보건 지도단속 등 6개 분야를 조사한 '대민· 대기관 청렴도' 부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10점 만점에 각각 청렴도지수 8.84와 8.97을 기록,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12위와 10위를 기록했다.

또 1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내부업무 청렴도 분야에서 광주시가 6.65점을 얻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꼴찌를 했고, 전남도는 7.33점으로 14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9.0 이상 된 시·군·구는 광주 동구(9.12)와 서구(9.11), 전남의 여수시(9.08), 순천시(9.08), 광양시(9.03), 담양군(9.11), 보성군(9.05), 해남군(9.11) 등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대민·대기관 청렴도 (10점 만점 기준)

순위	16개 시·도 (청렴도 지수)	시·도 교육청 (청렴도 지수)
1	강원 (9.25)	강원 (9.07)
2	경북 (9.22)	충남 (9.05)
3	충북 (9.15)	대전 (8.98)
4	대전 (9.14)	제주 (8.91)
5	충남 (9.10)	대구 (8.85)
6	서울 (9.08)	경기 (8.58)
7	부산 (9.05)	충북 (8.56)
8	대구 (9.04)	울산 (8.49)
9	울산 (9.00)	경남 (8.44)
10	전북 (8.97)	경북 (8.33)
10	**전남 (8.97)**	**광주 (8.23)**
12	**광주 (8.84)**	전북 (8.09)
13	제주 (8.83)	**전남 (8.01)**
14	인천 (8.67)	부산 (7.99)
15	경남 (8.54)	인천 (7.60)
16	경기 (8.30)	서울 (6.72)

또 금품제공률이 '0'인 기관에는 전남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해남군, 장성군이 포함됐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민·대기관 청렴도' 부문에서는 광주교육청이 8.23을 기록해 전국 11위를 기록했으며 전남교육청은 8.01로 전국 13위를 기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李 당선인, 22일 전국 시·도지사 만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시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에서 열리는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을 만난다.

이번 만남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가 이 당선인을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문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각 지역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日만평 - 김종두

'그놈의 헌법을 존중하노라 !'

해남 옥천면에 위치한 해록녹차 영농법인 관계자들이 기름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녹차 유화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해남 녹차로 타르 제거

해록 영농법인 유화제 개발
태안 등 피해지역 무상 공급

해남의 녹차 생산업체에서 기름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녹차 유화제를 개발해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무상 공급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록 녹차 영농법인은 "녹차를 농축해 만든 친환경 유화제 5t을 기름 피해로 시름에 잠겨 있는 태안과 신안군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녹차 농축액 95%와 무화과 진액 2%, 식물성 계면 활성제 3%를 혼합해 만든 이 녹차 유화제는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이 기름 찌꺼기와 타르 등 해양 오염물질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화학성 유화제에 의한 2차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제재만을 사용해 바다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해록 측은 2천만 원 상당의 녹차 유화제 5t을 피해 지역 방제를 위해 기증키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사실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달 22일 본계약

올해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대한통운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사실상 선정됐다. 〈관련기사 11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대한통운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STX 컨소시엄은 이번 최종 평가에서 2위를 했으며 한진과 현대중공업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4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기준 22조 8천730억원으로 재계 7위에 오른데 이어 자산 1조5천억원짜리 대한통운마저 인수해 8위 한진(22조2천240억원)을 완전히 제치고 GS(25조1천360억원)마저 턱밑까지 추격하게 됐다.

이번 인수전에서 법원은 베팅금액보다는 보다 나은 경영비전을 제시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수후 경영능력, 사업계획과 함께 종업원의 고용안정 등 비계량 항목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4조원대 초반에 대한통운 인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업실사를 거친 뒤 내달 22일 본계약을 맺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지방노동청 공고 제 2008- 2호

『2008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공모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발굴과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역 파트너쉽에 기초한 「2008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8일

광주지방노동청장 권 영 순

사업개요

○ 우리지역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관련 유관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산업·고용 특성에 맞는 고용·인적자원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참여대상

○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주체인 컨소시엄
- 지방자치단체는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상호간 또는 관련 지자체간 협력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우대
- 지역고용포럼사업은 관련전문가 등이 "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응모 가능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

○ 지원대상 사업
-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집행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특화 사업"** : 지역 특화·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인적자원개발 추구하는 사업
  ※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 지역고용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로써, 향후 특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연구사업
  ※ '08년 사업 중 개별적인 연구사업은 최소화하고 시·도별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내 고용·인적자원개발 종합평가 사업은 필수 선정
- **"패키지 사업"** : 위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

■ 중점 지원대상 ■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구축
- 광역지자체별 중장기적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내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종합평가
- 지역노동시장 통계 인프라 구축 사업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업

○ 지역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과의 중복사업은 배제
- 여성 특화 사업 우대

○ 기타 지역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내역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사업별 최대 3억원, 최고 3년 지원, 단 지역고용인프라 구축사업은 1억원 한도)
  ※ 사무실 운영 등 사업관리비 성격의 인건비 보조를 포함한 간접사업비는 전체 보조금의 25% 이내에서 지원
  ※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지원협약 체결시 지방노동청이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 사업 제안시는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하여야 함

지원대상사업 선정 방법

○ 시·도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선정
※ 계속사업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은 20% 이내에서 사업비 증액 인정, 보통사업은 전년수준의 사업비, 미흡사업은 계속사업에서 탈락

지원기간

○ 기간 '08. 3. 2 ~ '08. 11. 30 까지로 함
※ 사업별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나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연구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연구를 완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08. 1. 18(금) ~ '08. 2. 11(월)
○ 신청방법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제안서」, 「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15부)
※ 접수마감일 당일 18 : 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제안서 양식 : 광주지방노동청(gwangju.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gwangju.work.go.kr)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계획서는 총 15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디스켓 또는 이메일로 송부(rm3116@hanmail.net)

선정결과 공고

○ 선정결과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광주지방노동청 및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류 미(062-609-8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